청소년들의 삶을 먼저 생각한다면, '학습시간 줄이기'를!

- 정당들의 학습시간 줄이기 정책 답변에 대한 논평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정의당(가나다 순)에 '학습시간줄이기'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정책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질의 시점에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것 등, 실무적 이유 등으로 질의서를 보내지 못한 정당들에는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이에 대해 답변해주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각 정당들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면서, 각 정당들의 답변과 답변에서 언급한 교육 공약 등에 대한 우리의 분석과 논평을 발표한다.

1. 우선 답변을 한 **정당들이 모두 '학습시간 줄이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정당들은 '안타까운 일이며 학습시간과 경쟁교육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체제 전환과 병행되어야'(노동당), '강제 학습노동의 실태가 심각한 문제라 여기고 있고 … 오로지 입시경쟁에 목을 매는 교육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녹색당),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과 강제 학습, 지나친 경쟁 교육실태에 대해 전적으로 문제 인식 공유'(더불어민주당), '교육 본질이나 학생인권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유감스러운 일'(정의당)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비판한다고 답변한 것에는,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장시간 학습의 문제는 90년대 이전부터 계속되어왔던 문제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잘못된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느낀다.

2. **학교에서의 학습 강요에 대한 대책**을 물은 것에 대해 모든 정당들이 문제의식에 공감했지만 상당수가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학교에서 정규 수업 외에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이 강요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강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없이 행정적 지침과 지도 정도로만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탓이 크다. 노동당이 친권자·교사 등의 장시간 학습 강요를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나, 녹색당의 '일정 범위를 넘어선 강제적 학습노동을 금지', "야자 보충 전면 금지" 공약 정도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었다. 그러나 강제성이나 시간에 무관하게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충수업'의 의미나 종류에 따라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습 강요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구체적 정책을 답변하지는 않고 과거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을 언급했는데, 당시 공약을 살펴도 '학습시간 기준 제시', '휴식과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 명시' 등의 내용이 있으나 학교에서의 학습 강요 문제에 대한 직접적 해결책은 없었다. 정의당은 현행법의 엄정한 적용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제시했는데, 굳이 조례여야만 할 이유는 없으므로 법률로 학습 강요 문제에 대처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정당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보충자율학습 등을 강요하는 일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근절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한 조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3. **수업시수 및 수업일수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함께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량을 규정하는 틀이므로 교육과정 개정에서 실질적으로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당들이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업일수를 줄이는 것만 검토해보겠다고 했을 뿐 수업시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정의당은 교육체제를 바꿔 학습량 적정화를 자연스레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정의당의 교육공약을 살펴보아도 교육체제를 바꿈에 있어서 과도한 수업시수·일수나 교과의 학습량 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치 못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줄이는 것 등에 동의한다고 답했는데, 노동당은 수업일수와 주당 수업시간 상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녹색당은 포괄적인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정책이 있음을 피력했다.

4. **야간·주말 학습 규제**에 대해, 답변한 정당들은 대체로 심야의 사교육 규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간자율학습 법령 금지, 학원 밤 8시 이후 야간 영업 제한, 주말학원 영업시간 금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하여 긍정적이지만 다소 유보적으로 보이는 입장이었다. 정의당은 심야 학원 제한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봤으나 학습량과 학습시간은 '체제를 바꿔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법'이 적절하다며 그 밖의 제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당은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금지, 주말 중 자율보충학습 금지',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에 일요일과 공휴일 휴무제'를 공약했다. 녹색당은 '심야학원교습금지', '야자금지'를 교육공약에 담았다. 학습시간에 대한 적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과도한 장시간 학습이 일반적 문화처럼 자리 잡은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므로 야간학습과 휴일학습 등을 규제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실질적 의미가 있다. 정당은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제시와 정치활동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정당들이 야간·주말의 제도적 학습을 규제할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란다.

5. **시험체제 개혁, 적정한 학습시간 제시와 장시간 학습의 유해성 홍보 등 학습시간을 줄이는 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표했다. 노동당은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고 초등 일제고사 폐지를 교육정책에 넣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 외 다른 시험(평가)체제나 학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안은 답하지 않았다. 녹색당은 시험 및 평가 체제 개혁에 동의한다고 하며 국가 수준 일제고사의 폐지와 함께 초등에서의 학급 단위 성취도 평가와 중등에서의 서술식 평가로 대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서열화 교육을 벗어날 방안으로는 적절하겠으나 교사의 서술식 평가가 교사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 될까 우려되는 점도 있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정 학습시간 상한선 제시 장시간 과중한 학습의 유해성 홍보 등을 위한 정책 및 특별법 제정 적극 동의'라고 답하고 시험체제 개혁 등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교육공약에 그런 의지와 계획을 담고 있다'라고 답했으나, 실제 교육공약을 살펴본 결과 구체적으로 적정 학습시간 상한을 제시하거나 시험체제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장시간 학습 현실을 탈피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장시간 학습의 압박을 받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의식은 꼭 필요하다. 정당들이 교육적이고 인권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정책과, 장시간 학습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을 갖게 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입시제도 개혁과 사회적 차별금지 등**에 대해서, 정당들은 취지에 동의했으나 세부적으로는 구체성이나 방안에 차이가 있었다. 정의당은 '고등학교만 마치고 사회에 진출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임금이나 처우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나라'를 제시했으며, 정책으로 대학·고교 서열화 해소 등을 공약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력차별금지법은 발의한 바 있다고 답했고, 대입시험 자격고사화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녹색당은 학교 밖 교육기관 지원,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한 서열화 해소, 기

본소득 및 학력차별금지법 등을 공약했다. 노동당도 기본소득을 공약한 바 있고, 질의에는 대학서열화 폐지를 위해 사립대학 공영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립대학을 공영화·국공립화하는 것만으로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러웠다. 입시제도 및 대학서열화 문제, 학력학벌 차별 문제 등은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온 문제이니만큼 정당들이 더 깊이 있고 종합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핵심 가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7. **청소년의 여가권 및 문화적 권리 등 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당은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과 예산을 증가시키겠다'고 답했고, 정의당도 '공공청소년기관·시설 및 인력 확충'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녹색당은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수립'과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공약이 있으나 그 외에는 관련 정책을 찾을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따로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전체 공약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문화인프라 확대 및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체험센터 확대를 포함시켰다. 공공성 있는 청소년들의 여가 시설과 여가활동의, 문화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것은 청소년의 쉴 권리, 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현재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사회활동에 대한 시설 수나 예산 등은 법에서 정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나 정책이 종종 후순위로 밀려나고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당들이 더 종합적으로 청소년의 삶과 이에 관한 정책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8. 정당들은 대체로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부담과 학습시간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의식에 비해서 정책의 구체성이나 종합성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거나 망설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청소년 집단이 선거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정책적 역량을 투여하지 않거나 부담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면도 있다.
청소년들을 교육의 대상이나 '미래의 인적 자원'이 아닌 한 명의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본다면, 그래서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학습시간줄이기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습시간 줄이기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 그 이상의 포괄적인 상황인식과 문제의식, 그리고 정책들이 필요하다. 각 정당들이 청소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거나 기존 정책들을 보완하기를 바란다.

2016년 4월 12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첨부 1] 학습시간 줄이기 질의서
[첨부 2] 노동당·녹색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답변서

[첨부1]
[학습시간 줄이기 질의서]

1. ‘아수나로’에서 실시한 <학습시간과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2015)>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인문계고 학생 85.6%가 “학업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응답했고 초등학생 43%, 중학생 71.8%가 학업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문계고 학생 96.8% ‘학교에서 야자를 시행’한다고 답했고 주말에 보충수업·자율학습을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문계열고 학생 중 67.3%, 약 2/3가 주말에 보충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시행한다고 답했고, 이 중에선 38.9%(인문계열고 학생 전체의 19.5%)가 학교로부터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인 점심시간에도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귀 정당에서는 교육당사자인 학생들이 호소하는 학습부담과 강제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실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2.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여전히 각종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강요당하는 실태도 심각했습니다. 오후보충수업을 시행한다고 응답한 중학생 중의 32.8%, 인문계열고 학생 중의 50.3%가 오후보충수업 참여를 학교로부터 강요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저녁도 주말도 없이, 방학과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은 각종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또한‘주변에서 성적압박 받는다’(61.7%), ‘쉴 때도 불안하고 초조하다’(54.7%)는 응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쉬지도, 자지도 못하는 비인간적 학습 실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귀 정당에서는 이러한 반복되는 실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3.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몇몇 지역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 등교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학교의 하교시간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업시수와 일수가 변하지 않은 채 등교시간만 늦췄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두고 야간노동, 주말노동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시간 또한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학습시간을 줄이는 첫 단추는 바로 공식적인 학교의 수업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9시 등교, 3시 이전 하교(수업 종료), 수업시수 및 교과목 축소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교육과정을 더 적은 양, 더 쉬운 난이도로 바꿔 주당 30시간 이하의 수업만 하도록 학습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180일 이상 185일 이하'로 고쳐서, 3개월 이상의 방학일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귀 정당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규 수업 외의 보충/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 또한 문제입니다. '하루 6시간 학습'을 이루려면 정규 수업 외에도 강요되는 여러 학습을 줄여야 합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도 학원, 과외,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당합니다.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제도는 법령으로 금지하고, 도서관 또는 독서실 정도만 개방해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을 개정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 목적의 학원도 밤 8시 이후 야간 영업을 규제하고 주말 학원 영업도 마찬가지로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귀 정당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5. 학습시간과 학습부담을 줄이고, 경쟁과 성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 등수 매기기, 상대평가식 시험

을 중단시키고 시험 횟수를 줄이는 등 종합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적정한 학습시간의 상한선을 제시하고 장시간 과중한 학습의 유해성을 홍보, 교육하며 학습시간과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안을 정부가 만들어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 정당은 이에 기반한 정책 및 특별법 등의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할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까?

6. 우리는 학습시간과 학습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학생·청소년들의 휴식권과 놀 권리를 위해 질 좋은 여가 활동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 예산을 확충하여 문화예술활동, 놀이활동, 사회참여활동의 활성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를 단계적으로 없애나가고 학력학벌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학시험을 자격고사화하여 경쟁의 승패가 아닌 공부에 대한 의지와 필요한 노력만으로 대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귀 정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부2]
[노동당 답변]

1. ‘아수나로’에서 실시한 <학습시간과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2015)>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인문계고 학생 85.6%가 “학업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응답했고 초등학생 43%, 중학생 71.8%가 학업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인문계고 학생 96.8% ‘학교에서 야자를 시행’한다고 답했고 주말에 보충수업·자율학습을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문계열고 학생 중 67.3%, 약 2/3가 주말에 보충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시행한다고 답했고, 이 중에선 38.9%(인문계열고 학생 전체의 19.5%)가 학교로부터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인 점심시간에도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귀 정당에서는 교육당사자인 학생들이 호소하는 학습부담과 강제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실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습시간과 경쟁교육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런 현상의 배후에 있는 사회체제의 전환과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교육은 평범한 노동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어떤 일을 해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생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노동당은 교육불평등 해소도 경쟁교육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로 보아 아래와 같은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 **수업료를 더 받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폐지(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립 국제중학교를 일반 중학교로, 자사고·사립 특목고·공립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등학교로 전환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 추진

2.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여전히 각종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강요당하는 실태도 심각했습니다. 오후보충수업을 시행한다고 응답한 중학생 중의 32.8%, 인문계열고 학생 중의 50.3%가 오후보충수업 참여를 학교로부터 강요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저녁도 주말도 없이, 방학과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은 각종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또한‘주변에서 성적압박 받는다’(61.7%), ‘쉴 때도 불안하고 초조하다’(54.7%)는 응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쉬지도, 자지도 못하는 비인간적 학습 실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귀 정당에서는 이러한 반복되는 실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노동당은 청소년이 장기간 학습을 강요받는 것을 청소년의 인권침해로 보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이번 총선에 채택했습니다.

- **장시간 학습강요를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 : 학교, 친권자, 교사 등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장시간 학습을 강요하는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
- **청소년기본법 개정 :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과 예산을 증가시켜 문화예술활동, 놀이활동, 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킴**

3.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몇몇 지역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 등교를 시

행하는 대부분의 학교의 하교시간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업시수와 일수가 변하지 않은 채 등교시간만 늦췄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두고 야간노동, 주말노동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시간 또한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학습시간을 줄이는 첫 단추는 바로 공식적인 학교의 수업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9시 등교, 3시 이전 하교(수업 종료), 수업시수 및 교과목 축소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교육과정을 더 적은 양, 더 쉬운 난이도로 바꿔 주당 30시간 이하의 수업만 하도록 학습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180일 이상 185일 이하'로 고쳐서, 3개월 이상의 방학일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귀 정당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당은 초중등 교육에서 수입일수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정 수업일수를 현행 190일 이상에서 180일 이상 185일 이하로 규정
-야간자율학습, 주말 중 자율보충학습 등을 금지
-수업시수의 상한선을 명시하여 주당 30시간 이하의 수업만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 고시할 때 기준을 법률로 제한

4. 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규 수업 외의 보충/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 또한 문제입니다. '하루 6시간 학습'을 이루려면 정규 수업 외에도 강요되는 여러 학습을 줄여야 합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도 학원, 과외,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당합니다.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제도는 법령으로 금지하고, 도서관 또는 독서실 정도만 개방해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을 개정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 목적의 학원도 밤 8시 이후 야간 영업을 규제하고 주말 학원 영업도 마찬가지로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귀 정당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기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금지는 정책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에 일요일과 공휴일 휴무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5. 학습시간과 학습부담을 줄이고, 경쟁과 성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 등수 매기기, 상대평가식 시험을 중단시키고 시험 횟수를 줄이는 등 종합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적정한 학습시간의 상한선을 제시하고 장시간 과중한 학습의 유해성을 홍보, 교육하며 학습시간과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안을 정부가 만들어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 정당은 이에 기반한 정책 및 특별법 등의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할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까?

아수나로의 제안에 적극 찬성하며, 그 일환으로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도 노동당의 교육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6. 우리는 학습시간과 학습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학생·청소년들의 휴식권과 놀 권리를 위해 질 좋은 여가 활동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 예산을 확충하여 문화예술활동, 놀이활동, 사회참여활동의 활성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학서

열화를 단계적으로 없애나가고 학력학벌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학시험을 자격고사화하여 경쟁의 승패가 아닌 공부에 대한 의지와 필요한 노력만으로 대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귀 정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당은 대학서열화 폐지와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사립대를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하고 국공립대학과의 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는 방안을 청년 정책에 핵심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를 위한 법안으로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역시 공약화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해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과 예산을 증가시켜 문화예술활동, 놀이활동, 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정책도 채택했습니다.

*** 귀 단체의 노동당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당의 교육 정책과 청년 정책을 별첨합니다.**

[녹색당 답변]

1, 2, 4번 질문에 대하여

녹색당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 학습노동의 실태가 심각한 문제라 여기고 있습니다. 억압적인 학교에서 오로지 입시경쟁에 목을 매는 교육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적 '학습 노동' 금지를 법제화하겠다.

○ 배움 주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수용 가능한 학습 시간의 범위를 산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강제적 '학습노동'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뒤 제정하겠다.

나. 학생 안식년제, 학기 중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

○ 중등교육과정 6년 중 1년은 학생 안식년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고등학생의 1년 수업일수 중 10% 범위 내에서 학기 중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

- 덴마크 교육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 중의 하나는 공교육 트랙에서 빠져나와 다양한 활동과 공동의 기숙생활을 통해 대화와 토론, 인문적 교양을 쌓음으로써 '삶의 기술'을 배우게 하는 수많은 '애프터스콜레'의 존재다. 이것은 덴마크의 공교육 제도가 학생들이 공교육 학제의 트랙을 빠져나올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청소년의 1/3 정도가 애프터스콜레에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진출, 혹은 기존 학교로의 복귀를 선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교육 트랙에서 빠져나와 진로를 설계하고, 심신을 휴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관조하고 설계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와 같이 중학교 1~2학년 시기를 특정하고, 한 학기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보장하고, 1년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3번 질문에 대하여

수업시간, 수업시수, 교과목, 교육과정 등을 축소하여 학습부담을 줄이자는 아수나로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에 덧붙여 현행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교육의 녹색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과정 혁신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대토론을 시작하겠다.

○ 전인적 조화로움을 위한 배움, 미래사회에 필요한 배움, 생태위기와 저성장 탈성장의 시대에 필요한 배움을 위해서는 국가가 아닌 사회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권한을 갖는 교육과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시민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토론을 이끌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적 대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생태위기, 경제위기, 사회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혁신하겠다.

다. 인지 교과를 축소하고, 노작과 예술, 체육 등 '몸을 쓰는 교육과정'으로 혁신하겠다.

○ 인지교과의 이수단위수를 대폭 조정하고, 농사, 원예, 목공, 적정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실과교육, 노작교육을 도입/강화한다.

○ 국제적 연대활동과 연계하여 (세계)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 지역,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학교가 일정 시간 이상의 생태교육을 하도록 한다.

라. 농사·급식과 연계한 먹거리 교육(배움)과 에너지 자립 교육을 도입하고 구현하겠다.

○ 먹거리와 에너지는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방식이며,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접 실천하고 구현하는 방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마. 교육공간을 녹색화하겠다.

○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 텃밭, 학교 숲 등 생태학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용이하게 한다.

○ 거대 학교, 과밀 학급의 학생 수를 줄인다.

바. **지역 및 학교, 교사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및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학교문화와 수업으로 관철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제시된 교육과정을 지역의 상황, 학교의 교육이념, 교사의 교육철학에 바탕하여 선택적으로 재구성하는 권리는 교육적 자유의 측면에서도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적 흐름에서도 보편적인 상식이다.

5번 질문에 대하여.

학교에서 이뤄지는 시험 및 평가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녹색당은 평가체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국가 수준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하겠다.

○ 성취도 평가는 표본을 추출하여 시행하고 평가 결과는 연구용으로만 사용을 제한한다.

나. 초등 교육의 기존 평가를 폐지하고, 년 2회 담당 교사 주도의 학급 단위 성취도 평가만 시행하겠다.

○ 이미 전북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시행하려는 방향이다. 학생 성취도 관리는 표본형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초등교육의 경우 학급단위의 자율적 성취도 평가만으로도 의미 있는 교육적 환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오

히려 더욱 실질적인 평가체제가 될 것이다.

다. 중등 교육의 교육(배움)은 학생성장기록부(학생이력철)의 기록 및 서술식 평가로 대체하겠다.

○ 노무현 정부 당시 교육혁신위에서 제안하였으나 결국 폐기된 '학생이력철'은 평가와 교육 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교육 평가의 무게중심을 지필 및 수행평가와 같은 특정한 시기에 확인하는 계량화된 수치와 서열화 체제가 아니라 일상적 대화와 관찰에 기반한 서술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 이러한 평가 체제의 급진적 변화 없이는 개별 배움 주체가 학교 교육에서 획득할 삶과의 연관을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녹색화와 마찬가지로 평가체제의 급진적 개혁은 당장 사회적 공론화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6번 질문에 대하여.

학교는 입시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비단 학교교육 뿐 아니라 학교 밖에 존재하는 교육기관들을 지원하여 학교교육으로 충족되지 않는 다양한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녹색당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학력학벌체제와 대학서열화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을 억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열을 부추겨 대학의 과잉팽창 및 거기서 파생되는 등록금 상승, 대학교육 부실화, 임금차별 등 숱한 병리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대학은 가고 싶으면 누구나 장벽없이 갈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녹색당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인지 교과를 축소하고, 노작과 예술, 체육 등 '몸을 쓰는 교육과정'으로 혁신하겠다.

○ 인지교과의 이수단위수를 대폭 조정하고, 농사, 원예, 목공, 적정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실과교육, 노작교육을 도입/강화한다.

○ 국제적 연대활동과 연계하여 (세계)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 지역,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학교가 일정 시간 이상의 생태교육을 하도록 한다.

나. 농사·급식과 연계한 먹거리 교육(배움)과 에너지 자립 교육을 도입하고 구현하겠다.

○ 먹거리와 에너지는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방식이며,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접 실천하고 구현하는 방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다. 교육공간을 녹색화하겠다.

○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 텃밭, 학교 숲 등 생태학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용이하게 한다.

○ 거대 학교, 과밀 학급의 학생 수를 줄인다.

라. 학교 밖 교육기관에도 공교육비를 지원하며, 다양한 교육기관의 자유로운 설립을 지원하겠다.

○ 학교 밖 청소년, 대학비진학자들이 선택한 교육기관에도 1인당 공교육비(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초등 6,976달러, 중등 8,199달러, 고등 99,278달러, 이상 구매력지수 기준)를 지원하여 학교 밖 교육기관을 공교육화 함으로써 교육 공공성을 확장하며, 배움 주체들의 교육의 권리를 신장한다.

- 시장이 교육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키울 염려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평생교육 체제 정비'와 엮어서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 한국의 공교육은 사실상 '학교 교육'으로 통일되어 있다. 대안교육을 포함한 학교 밖 교육에 대해 국가의 지원은 매우 빈약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규제와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 추세와 비추어볼 때에도 매우 후진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권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며, 배움 주체의 교육 선택권의 측면에서도 교육다양성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교육기관의 설립과 지원에 대한 현재의 체제는 전면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마. 청소년·청년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아닌 임금노동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청소년、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우선 보장한다.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만15세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 이를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자립의 기반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한다. 청년의 범위는 일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범위인 만 29세까지로 정한다.

바.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 시 학력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학력차별금제법의 골자가 될 것이다.

사.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를 구축하겠다.

○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으로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합입학자격고사로 학생을 선발하고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교육과 연구를 위한 협력체제를 세운다.

[더불어민주당 답변]

1.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과 강제 학습, 지나친 경재의 교육실태에 대해 전적으로 문제 인식 공유
   -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0교시, 우열반 편성, 야자 등 학교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취해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함

2. 강제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에 대한 규제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량으로 학생의 인권.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한 점을 들어 '쉼표가 있는 교육' 정책을 공약한 바 있음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법정 수업일수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음

4. 야간자율학습 법령 금지, 학원 밤 8시 이후 야간 영업 제한, 주말학원 영업시간 금지 등을 검토하겠음. 다만 학원시간 제한 및 주말 학원 영업 금지의 경우 풍선효과, 특히 고액과외 양산 우려가 있어 현장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보고 판단하겠음

5. 적정 학습시간 상한선 제시 장시간 과중한 학습의 유해성 홍보 등을 위한 정책 및 특별법 제정 적극 동의

6. 학력차별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대학입학시험 자격고사 검토하겠음.

[정의당 답변]

* 질의는 축약하였습니다

1. 귀 정당에서는 교육당사자인 학생들이 호소하는 학습부담과 강제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실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교육 본질이나 학생인권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교육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교육의 체제, 문화, 관계 등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바뀌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이루기 위해 20대 총선 교육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2. (강제적이고 과도한 야자 등) 귀 정당에서는 이러한 반복되는 실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현실적으로 입시위주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 학생인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과 교육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에 저촉됩니다.

○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행법의 엄정한 적용,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교육공약은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3. (학습시간 단축 등) 귀 정당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의 학습시간과 학습량은 과도합니다. 이는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그런 만큼, 학습량 적정화가 필요합니다. 학습시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과정과 학교교육 체제를 바꿔 자연스럽게 학습량을 적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야자 금지, 밤 8시 이후 학원 금지, 주말 학원 금지) 귀 정당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학습량과 학습시간 적정화는 직접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체제를 바꿔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 직접 제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한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컨대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은 학생의 건강권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학습시간 줄이기, 경쟁 줄이기, 상대평가 줄이기 등 종합적 정책을 정부가 만들어 집행) 귀 정당은 이에 기반한 정책 및 특별법 등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할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정의당 교육공약은 그런 의지와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체제의 개편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골고루 신장시키는 교육, 함께 커가는 교육,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이루고자 합니다.

6. (대학서열 완화와 학력학벌차별 금지, 대입 자격고사화 등) 귀 정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등학교만 마치고 사회에 진출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임금이나 처우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나라가 교육선진국입니다. 정의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